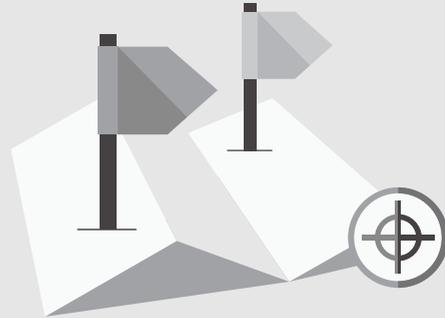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생계비 지출 수준 비교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김태완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김기태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
여유진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
이주미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
김기태·이주미

[부록]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구 지출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¹⁾

A Study on the core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김기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주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글에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를 ‘핵심생계비’라 명명하고,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유럽 국가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핵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47.2%)은 그 비율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는 가장 높았다. 의료비(6.8%)는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가구 소비지출에 대비해서 보면, 한국 노인 단독 가구의 핵심생계비 지출(48.0%)이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가구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²⁾

한국은 ‘고비용 사회’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을 보면, 가계에 부과되는 의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전 국민의 손에 대부분 들려 있는 휴대전화의 사용 비용, 여타 통신비 그리고 교통비까지 쓰고 나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2) 이 글을 쓰기 위한 연구 방법은 부록을 참고할 것

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부족, 중국의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봉쇄 조치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OECD, 2022).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의 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가계의 지출 부담 절감이라는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지난 정부는 소득 주도성장의 주요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가계 지출 경감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부 항목으로 ‘의료비 경감, 보육료 경감, 주거 부담 경감, 교육·교통·통신비 경감’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계 지출 경감에 대한 지난 정부의 정책 성과를 뚜렷이 확인하기는 어렵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이유를 살펴보면, 가계 지출 경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희소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가계 지출 부담에 관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위한 분석틀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유진(2002)은 한국 사회 소비지출의 불평등 경향에 주목하고, 그 내적 기여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드문 연구이다. 당시 도시가계조사를 활용해 1982~2000년 동안 소비 항목별로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김기태 외(2019)는 한국과 다른 네 가지 유형 복지국가(스웨덴, 미국, 일본, 독일)의 ‘가용소득’을 비교하고 관련 정책 제언을 시도한 드문 예이다. 해당 연구에서 가용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운데 주거, 의료, 보육,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거에 관한 지출에는 주택 소유 혹은 임차를 위한 부채 원금 상환액 및 이자액을 포함”(김기태 외, 2019, p. 5)했다.

이현주 외(2020)의 연구는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가계의 빈곤율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및 돌봄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산출한 뒤, 각각 가처분소득과 조정가처분소득의 소득 분배 지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영역의 사회서비스가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확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가계 지출 수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러한 무관심은 지금까지 재분배와 관련한 연구가 국가의 공적이전소득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경로가 공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계의 불가피한 지출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돌봄 등의 제반 사회 정책 영역에서 공적인 규제, 공적인 전달, 공적인 지원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책 효과는 가능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 글의 분석에서는 소비 항목별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기획의 앞선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 8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지출 부담 수준을 각각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영역의 지출 부담분을 묶어 ‘핵심생계비’라 명명하고 9개 나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두고자 한다. 핵심생계비의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이다. 과연 가계 핵심생계비의 하위 범주에 네 가지 범주만 포함되느냐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밖의 다른 소비지출 범주도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혹은 사회 정책적 함의가 있는 분야에 한정해 가계의 지출 수준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 정책의 영역인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통신 분야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인 김기태 외(2019)의 선택이 있다는 점도 밝혀 둔다.

2. 9개국의 가구 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그림 1]에서는 이 글에서 규정하는 핵심생계비의 국가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모는 가계의 소비지출이다. 이를 통해 국가별 핵심생계비의 몇 가지 지출 경향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47.2%)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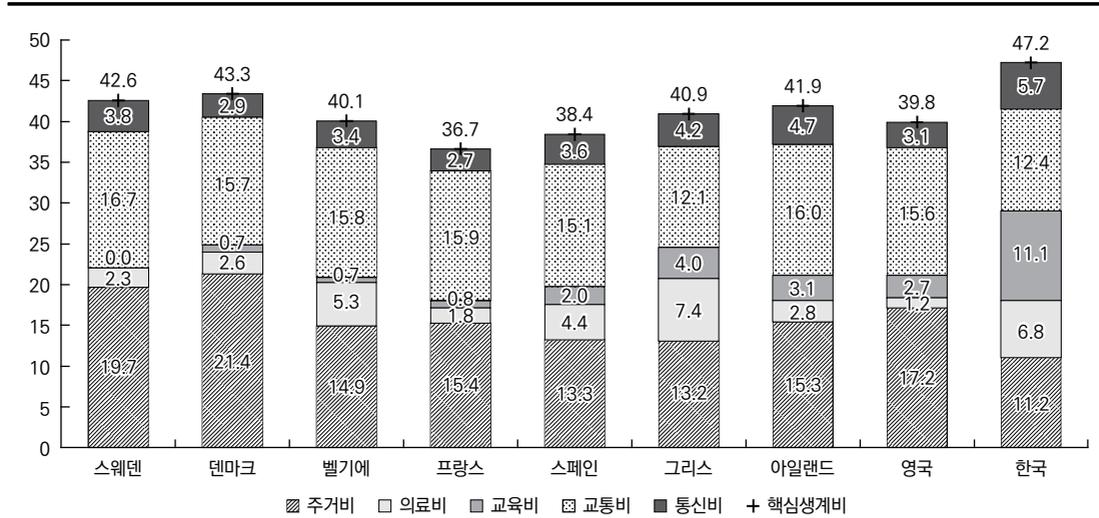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가장 낮았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 부담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의료비(6.8%)는 그리스(7.4%)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덴마크(43.3%)와 스웨덴(42.6%)이 한국 다음으로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이 높았다. 북유럽 국가의 가계 지출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두 나라 모두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각각 21.4%, 19.7%로 높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북유럽의 집합적 소비 문화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크게 낮춘 것은 사실이나, 주거·수도·광열비를 잡지 못한 것이 가계의 지출 부담을 높였다. 프랑스는 핵심생계비 비율이 36.7%로 가장 낮았다. 주거·수도·광열비 비율(15.4%), 의료비(1.8%), 교육비(0.8%) 등에서 지출 부담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9개 국가를 종합해서 보면, 가계의 핵심생계비 가운데 주거·수도·광열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비율이 소비지출의 20% 전후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수치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주거·수도·광열비가 15% 전후를 차지했다. 한국(11.2%)은 예외였다.

그림 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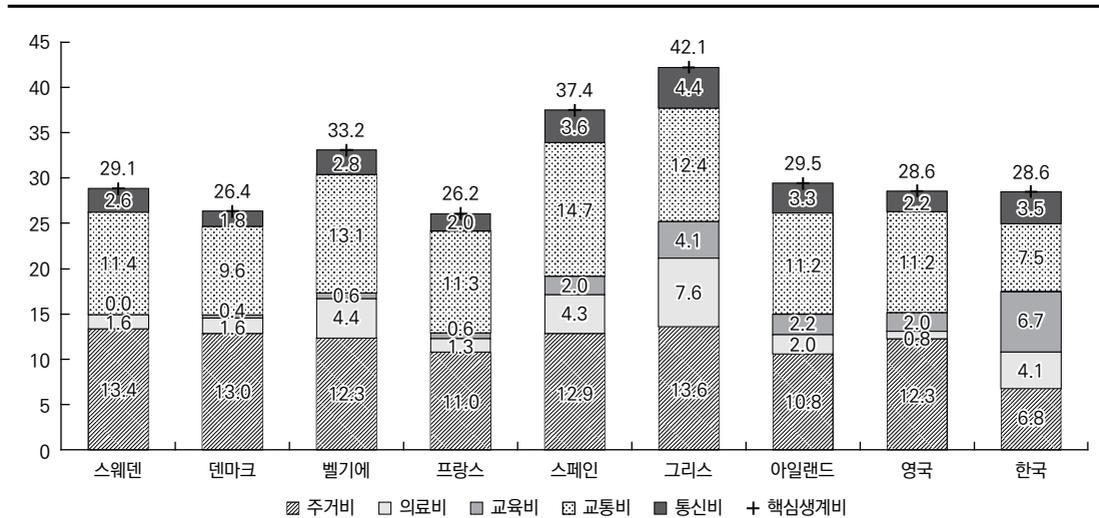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65).

그림 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67).

대부분의 국가는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에 서 의료비, 교육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은 보편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을 정비하여 의료비 부담 비율을 2.5% 이내로 관리했다. 한국의 6.8% 수준과는 대조되는 수치이다. 또한 북유럽과 유럽 대륙의 보수주의 유형 국가(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교육비를 1% 이내로 관리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반면,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11.1%로 매우 높았다. 비교 대상인 유럽 국가 가운데 교육비 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그리스(4.0%)보다도 7.1%포인트가 높았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한국의 사교육비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2]에서는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영국은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이 각각 28.6%로 동일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26.2%)와 덴마크(26.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그리스(42.1%)와 스페인(37.4%)이 상대적으로 핵심생계비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계의 소득액보다 소비지출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액을 분모로 하면 핵심생계비 비율이 줄어든다.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는 소득을 분모에 놓았을 때 핵심생계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두 나라는 소득액이 소비지출액보다 적기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모가 작아지면서 핵심생계비 비율이 상승했다.

한국과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이 같은 영국의 지출 영역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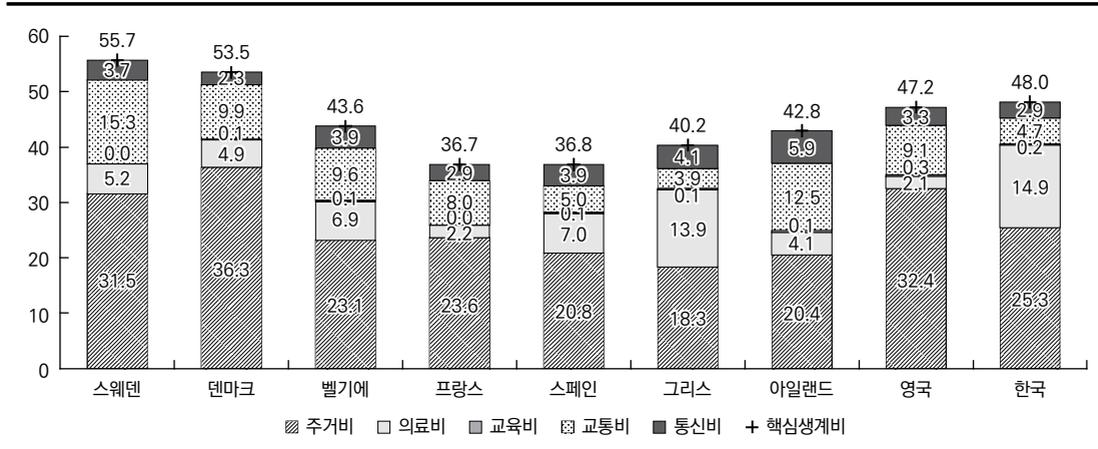
을 것이다. 영국은 주거·수도·광열(12.3%), 교통(11.2%)이 주된 지출 영역이라면, 한국은 교통(7.5%), 주거·수도·광열(6.8%), 교육(6.7%)이 크게 가계에 부담을 주었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 영역에서 절감한 비용 대부분을 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노인 단독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48.0%)은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그림 3). 한국 노인 가구에서는 주거·수도·광열비 부담(25.3%)이 낮았지만, 의료비 부담(14.9%)이 상당히 높았다. 남부 유럽 2개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 노인 단독 가구의 지출 고부담 영역은 주거·수도·광열 다음으로 교통이었다. 반면, 남유럽과 한국에서는 주거·수도·광열 다음으로 의료가 부담이 큰 지출 영역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단독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거의 없었다.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은 한국이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4). 프랑스(25.6%), 스페인(30.9%), 아일랜드(32.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16.5%)와 아일랜드(15.6%)의 독거노인은 한국(17.9%) 독거노인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이 이채롭다. 참고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귀속임대료(imputed rent)를 주거·수도·광열비에 포함할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귀속임대료를 분석에 포함하지는 않았다³⁾. 노인들의 경우 자가 소유자가 많은 것이 주

그림 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 단독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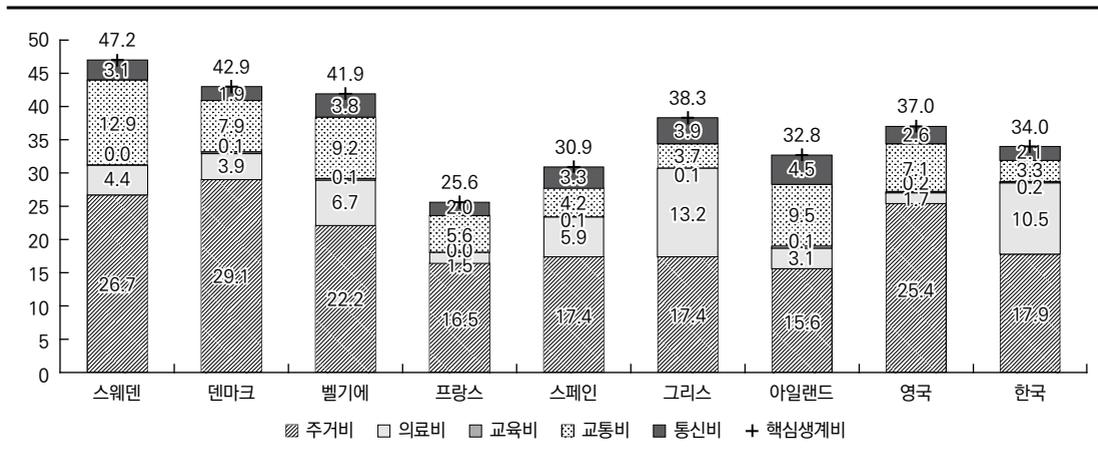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68).

그림 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 단독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69).

3) 귀속임대료는 자기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로 추정하는 액수이다(홍민기, 2015). 유럽연합의 가구지출설문(HBS: Household Budget Survey)에서는 귀속임대료 통계를 담고 있으나,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관련 통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자가 주택 비율이 높은 노인 가구에서 귀속임대료를 지출로 환산할 경우, 주거비 부담 수준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물론 귀속임대료를 이번 연구의 취지를 반영하는 가계의 지출 부담으로 고려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크다.

된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거노인은 의료비(10.5%) 부담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그리스(13.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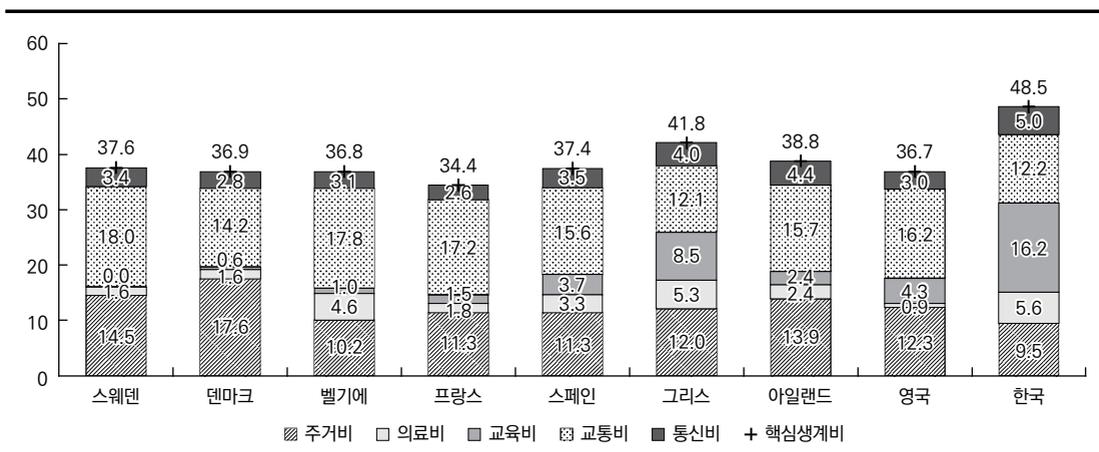
다음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5). 한국이 48.5%로 가장 높았다. 한국 4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9.5%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자리대였지만, 교육비가 1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비는 한국 가계의 '밑 빠진 독'이었다. 특히 한국은 초·중·고교 사교육비 지출액이 2019년 21조 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액인 1,924조 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0).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2만 1천 원이었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는 42만 9천 원이 지출됐다. 이는

교육과 관련한 OECD(2021) 통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한국 4인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그리스(8.5%)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통신비, 의료비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통비 부담 비율이 5.0%, 의료비 지출 비율은 5.6%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그리스(41.8%)가 두 번째로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비(12.1%), 주거·수도·광열비(12.0%), 교육비(8.5%) 부담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였다. 반면, 프랑스는 핵심생계비 비율이 34.4%로 가장 낮게 나왔다. 주거·수도·광열비(11.3%), 의료비(1.8%) 등을 전반적으로 낮게 관리한 것이 주

그림 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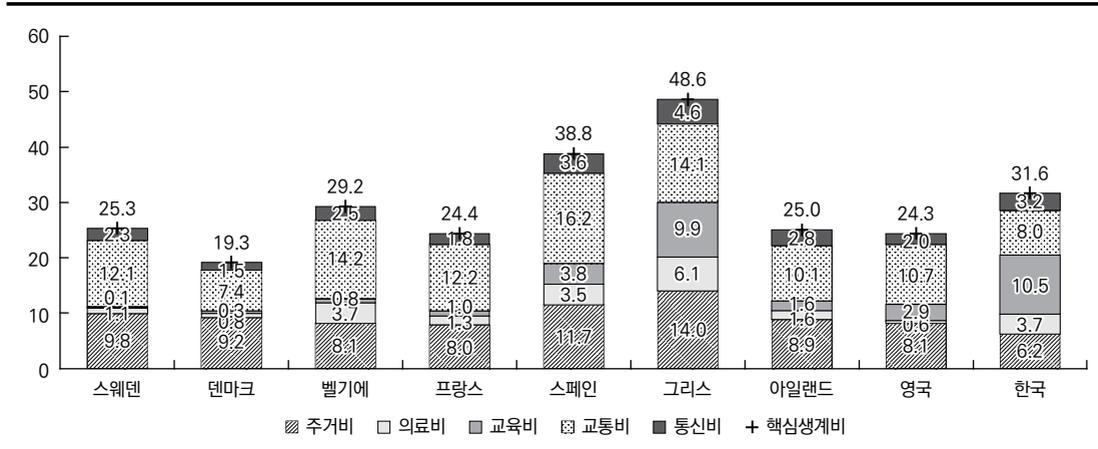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71).

그림 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원.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72).

된 원인이었다. 한국과 그리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이 36.7%(영국)~38.8%(아일랜드) 사이에서 조밀하게 분포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의료비를 1.6%로, 교육비를 0.0~0.6%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즉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통해 두 영역에서 가계 지출을 절감하는 데 성공한 반면 14%가 넘는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을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덴마크의 4인 가구는 소비지출액 가운데 17.6%를 주거·수도·광열비로 지출해,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4인 가구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를 살펴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그림 6). 분모가 되는 소득의 분포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덴마크(19.3%), 프랑스(24.4%)가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낮았다.

3. 9개국의 소득 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다음으로, 9개 국가의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소비지출에 대비해서 보았을 때, 소득 분위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근사한 국가였다(그림 7).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3.0%포인트였다. 그리스(0.6%포인트)는 차이가 매우 작은 반면, 영국(13.0% 포인트), 벨기에(12.9% 포인트)는 분위별 차이가 컸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9.5% 포인트), 덴마크(11.2% 포인트)는 1~5분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작지 않았다.

표 1.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47.7	47.1	42.7	41.3	38.2	42.6
덴마크	50.2	46.1	42.0	42.8	39.0	43.3
벨기에	49.3	42.6	40.0	37.3	36.4	40.1
프랑스	41.9	38.5	37.3	35.8	33.9	36.7
스페인	41.5	38.5	38.5	38.1	37.2	38.4
그리스	41.0	40.6	41.5	41.4	40.4	40.9
아일랜드	48.3	43.3	41.3	40.5	39.7	41.9
영국	49.8	41.7	38.8	37.3	36.8	39.8
한국	49.1	47.6	47.3	47.3	46.1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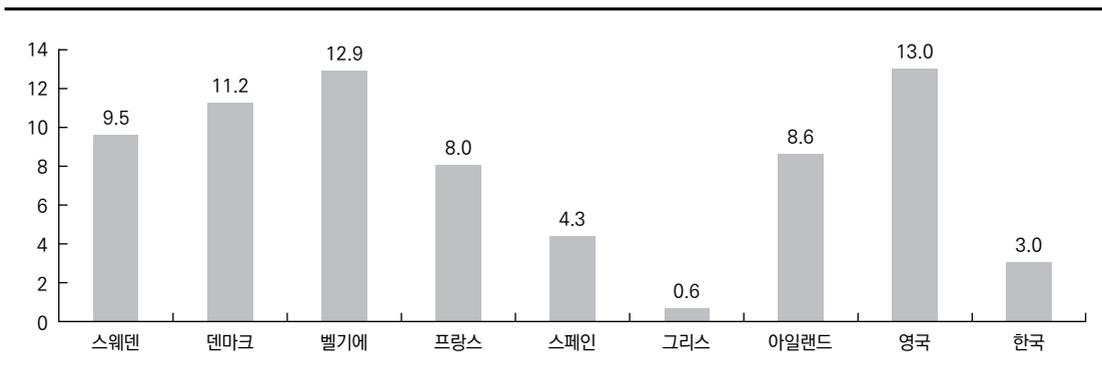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73).

그림 7.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분위·5분위 간 차이(전체 가구)

(단위: %p)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74).

한국에서 분위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주거·수도·광열비의 격차(1분위 17.1%, 5분위 9.0%)에도 불구하고, 교육비(1분위 7.0%, 5분위 11.6%)와 교통비(1분위 9.2%, 5분위 14.6%)에서 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부담이 올라간 것이 전체 분위별 격차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표 2).

교통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많은 국가에서 관찰됐다. 영국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주거·수도·광열비 격차가(1분위 34.5%, 5분위 10.8%)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이 전체 핵심생계비의 분위별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됐다.

표 2.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주거·수도·광열비	29.5	24.9	19.1	15.5	15.4	19.7
	의료비	2.4	3.4	1.9	2.3	1.9	2.3
	교육비	0.1	0.0	0.0	0.1	0.1	0.0
	교통비	11.4	14.6	17.4	19.8	17.8	16.7
	통신비	4.3	4.3	4.3	3.7	3.0	3.8
	핵심생계비	47.7	47.1	42.7	41.3	38.2	42.6
덴마크	주거·수도·광열비	33.2	27.5	20.4	16.8	15.7	21.4
	의료비	3.3	2.9	2.5	2.6	2.1	2.6
	교육비	0.2	0.4	1.1	1.0	0.5	0.7
	교통비	10.2	12.1	14.9	19.5	18.4	15.7
	통신비	3.2	3.2	3.0	3.0	2.4	2.9
	핵심생계비	50.2	46.1	42.0	42.8	39.0	43.3
벨기에	주거·수도·광열비	26.1	17.8	14.3	11.8	10.6	14.9
	의료비	5.7	5.9	5.5	5.4	4.6	5.3
	교육비	0.7	0.8	0.6	0.7	0.8	0.7
	교통비	12.3	14.2	16.1	16.3	17.7	15.8
	통신비	4.5	3.9	3.6	3.1	2.7	3.4
	핵심생계비	49.3	42.6	40.0	37.3	36.4	40.1
프랑스	주거·수도·광열비	21.8	19.2	16.2	13.3	11.7	15.4
	의료비	1.6	1.9	1.9	1.9	1.8	1.8
	교육비	1.4	0.5	0.6	0.6	1.1	0.8
	교통비	13.3	13.7	15.8	17.3	17.3	15.9
	통신비	3.8	3.2	2.8	2.6	2.1	2.7
	핵심생계비	41.9	38.5	37.3	35.8	33.9	36.7
스페인	주거·수도·광열비	18.4	15.1	13.0	12.2	11.4	13.3
	의료비	4.0	4.6	5.0	4.3	4.2	4.4
	교육비	1.2	1.3	1.8	2.0	2.9	2.0
	교통비	13.7	13.4	14.8	16.1	15.7	15.1
	통신비	4.3	4.2	3.9	3.5	3.0	3.6
	핵심생계비	41.5	38.5	38.5	38.1	37.2	38.4
그리스	주거·수도·광열비	17.9	15.9	13.8	12.4	10.3	13.2
	의료비	7.2	7.9	8.6	6.5	7.1	7.4
	교육비	3.1	3.0	3.7	4.6	4.5	4.0
	교통비	8.5	9.2	10.6	13.5	14.6	12.1
	통신비	4.2	4.5	4.8	4.3	3.8	4.2
	핵심생계비	41.0	40.6	41.5	41.4	40.4	40.9
아일랜드	주거·수도·광열비	25.0	19.7	15.0	12.5	10.8	15.3
	의료비	2.2	2.4	2.6	3.0	3.2	2.8
	교육비	4.3	2.3	2.5	3.3	3.3	3.1
	교통비	11.6	13.8	16.2	17.0	18.3	16.0
	통신비	5.3	5.2	5.0	4.6	4.0	4.7
	핵심생계비	48.3	43.3	41.3	40.5	39.7	41.9
영국	주거·수도·광열비	34.5	22.7	15.7	12.5	10.8	17.2
	의료비	0.8	1.2	1.1	1.3	1.3	1.2
	교육비	1.7	1.1	2.9	3.1	3.6	2.7
	교통비	9.7	13.2	15.6	17.4	18.4	15.6
	통신비	3.1	3.5	3.4	3.1	2.7	3.1
	핵심생계비	49.8	41.7	38.8	37.3	36.8	39.8
한국	주거·수도·광열비	17.1	12.9	10.9	10.2	9.0	11.2
	의료비	9.4	7.0	6.3	6.6	6.1	6.8
	교육비	7.0	10.2	11.7	12.6	11.6	11.1
	교통비	9.2	11.0	12.3	12.3	14.6	12.4
	통신비	6.4	6.5	6.1	5.6	4.8	5.7
	핵심생계비	49.1	47.6	47.3	47.3	46.1	47.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환.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75, 176).

9개 국가의 소득 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보면, 분위에 따른 비율 변화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3). 즉, 고소득 분위로 올라갈수록 핵심생계비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편, 한국은 분위별 차이를 비교적 완만하게 완만하게 유지했다. 한국의 1분위(43.5%)와 5분

위(22.5%)의 차이는 21.0%포인트로 가장 낮았다. 그리스(54.7% 포인트)와 영국(54.6% 포인트)에서 소득 분위별 차이가 가장 컸다. 그리스는 1분위(87.1%)와 5분위(32.4%)의 차이가 가장 도드라졌다.

표 3. 소득 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52.8	36.0	30.5	28.3	19.9	29.1
덴마크	50.0	34.5	27.4	24.6	18.0	26.4
벨기에	54.3	40.8	35.5	30.6	24.5	33.2
프랑스	48.2	33.6	29.3	25.4	18.4	26.2
스페인	67.2	45.2	40.0	36.3	29.0	37.4
그리스	87.1	49.2	45.4	40.7	32.4	42.1
아일랜드	56.1	35.4	30.8	27.7	21.9	29.5
영국	74.1	38.2	30.3	25.8	19.5	28.6
한국	43.5	33.6	30.6	28.4	22.5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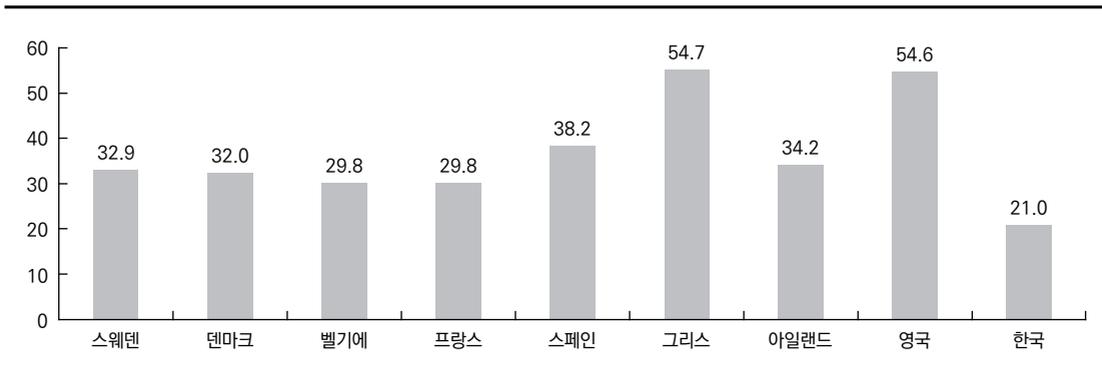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77).

그림 8.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분위·5분위 간 차이(전체 가구)

(단위: %p)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77).

북유럽 국가들은 의료비나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에서 5분위와 1분위의 차이가 4%포인트를 넘지 않았다.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제외하고 보면, 스웨덴은 교통비에서 분위별 차이가 가장 컸고(1분위 12.6% 대비 5분위 9.3%), 덴마크는 의료비에서 분위별 차이가 가장 컸다(1분위 3.3% 대비 5분위 1.1%). 이들 분야에서 가계지출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분위별 격차도 크지 않도록 관리했다. 유일한 문제가 주거·수도·광열비였는데, 지출 수준도 높고 분위 간 격차도 컸다. 스웨덴은 1분위(32.6%)와 5분위(8.0%)의 차이가 24.6%포인트였다.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복지국가에서도 분위별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 영역은 주거·수도·광열비였다.

다음으로, 9개 국가의 개별 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빈곤층이 몰려 있는 1분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그림 9). 특히 1분위의 지출 부담에 대한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통신 같은 서비스를 보편화할 경우,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일정한 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 영역에서는 재

난적 의료비 저소득층 차등 지원 제도가 있다.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분위의 지출 부담 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분위를 보면,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은 한국이 49.1%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는데, 그리스(41.0%), 스페인(41.5%), 프랑스(41.9%)였다. 나머지 다섯 나라는 48.3%(아일랜드)~50.2%(덴마크) 사이에 분포했다.

한국의 1분위는 주거·수도·광열비(17.1%)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2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는 가벼웠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저소득층이 다른 국가의 저소득층을 보면서 본인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가볍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1분위에 부담을 가중하는 비목은 의료비(9.4%)였다. 1분위의 의료비 부담이 한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그리스인데, 그 수치는 7.2%였다. 영국(0.8%), 프랑스(1.6%), 스웨덴(2.4%)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낮게 유지했다. 한국의 1분위에서 교육비 부담이 7.0%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1분위의 지출 부담이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였다. 덴마크는 의료비 부담은 3.3%, 교육비 부담은 0.2%로 낮게 관리했지만, 1분위의 주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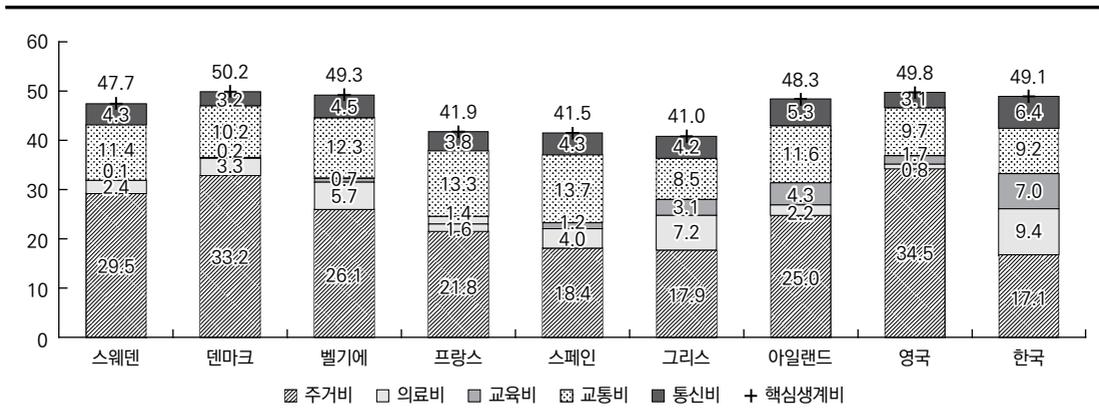
4) 9개국의 소득 대비 주택, 의료, 교육, 교통·통신 비율을 <표 2>와 같이 제시하려고 했으나, 지면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담지 못했다. 해당 내용은 김기태 외(2021), 7장의 <표 7-2-4>를 참고할 수 있다.

부담이 33.2%로 가장 높았고, 교통비 부담 역시 10.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는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소득계층에

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덴마크 다음으로 1분위의 핵심생계비 부담이 큰 나라는 영국(49.8%)이었는데, 이들도 소비지출 가운데 34.5%를 주거·수도·광열비로 썼다.

그림 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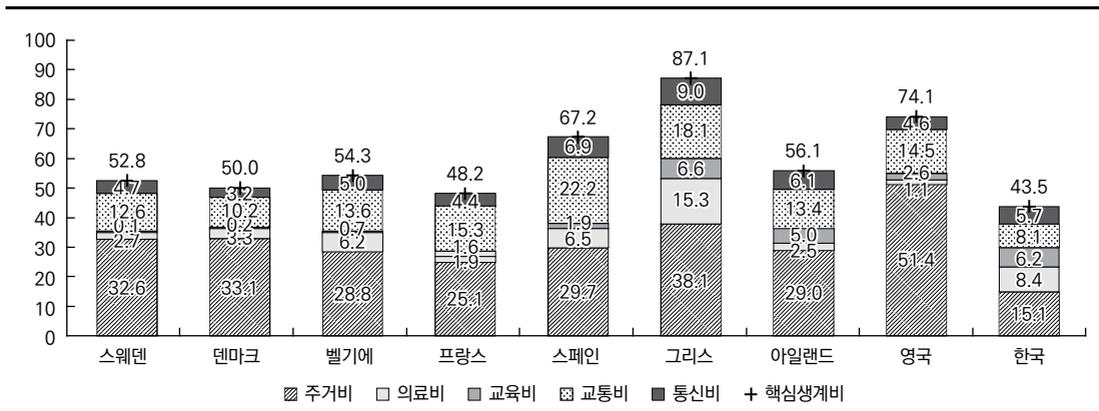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81).

그림 10.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84).

1분위의 핵심생계비 비율을 분석할 때 소득을 분모에 놓고 산출하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그림 10). 이 경우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소득 대비 1분위의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비율은 43.5%였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15.1%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다른 나라 저소득층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모두 25%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가벼운 편이었다. 한국 1분위의 교통비가 8.1%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점도 눈에 띈다.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모든 분위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에서는 소득 고분위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 등으로 교통비를 지출하는 동안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교통비 지출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 저소득층의 의료비(8.4%), 교육비(6.2%), 통신비(5.7%) 부담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9개 국가의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영역의 가계 지출 부담액을 합해 '핵심생계비'라 명명하고, 그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주거·광열·수도비의

지출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낮은 점은 다소 뜻밖의 결과였다. 이유는 대략 네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전세제도의 영향으로, 주거비로 측정되는 월세 부담이 낮게 집계된다. 둘째, 한국의 집값 수준은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측정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중간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임대료는 집값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NH 투자증권, 2019; 한겨레, 2019 재인용). 따라서 한국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 수준은 낮은 편이다. 셋째, 주거·수도·광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수준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OECD, 2013). 넷째, 한국의 주된 주거 공간인 아파트는 집 수리 및 관리 비용이 매우 적게 들며, 이웃 간 단열 및 냉·난방 효과가 매우 크다. 이 같은 요인들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음에도, 주택 관련 지출 부담 경감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한국의 가계가 다른 국가들의 주거비 부담과 비교하면서 고통을 체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1분위의 주거 관련 지출 비율이 소비지출 대비 17%를 넘어선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 사교육 영역에서 교육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사교육 경감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AI

학습 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이 유일하다. 국정과제에서 교육 영역을 포괄하는 국정 목표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제시된 점과 교육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한동안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 비율이 소비지출 대비 14.9%로 비교 대상 국가보다 높았다. 프랑스(2.2%), 영국(2.1%) 등의 국가에서 노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게 관리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비 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특히 1분위의 통신비 부담 비율이 6.4%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통신 분야는 분석 대상 비목 가운데 한국에서 공공의 개입이 가장 적은 분야다. 관련 정책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등으로 제한적이다. 통신 분야가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맥락에서 주로 접근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통신 분야의 공공성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으로 가계 지출 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성과를 위한 지표가 없는 것도 평가가 부재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한국 가계의 가구 유형 및 소득 분위별 지출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태, 정은희,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박은정, 송지원. (2019).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 서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여유진. (2002).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현주, 김현경, 류정희, 오욱찬, 전지현, 이승호, 이상돈, 윤여인. (2020).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한겨레. (2019. 1. 6.). 임대료 대비 집값, 서울시 '세계 1위'. 한겨레. www.hani.co.kr/arti/PRINT/877174.html에서 2022. 6. 13. 인출.

홍민기. (2015). 최상위 소득 비증의 장기 추세 (1958~2013년). *경제발전연구*, 21(4), 1-34.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Eurostat.

OECD. (2013). *Environment at a Glance*. Paris: OECD.

OECD. (2021). *Public spending on education(indicator)*. doi: 10.1787/f99b45d0-en;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indicator)*. doi: 10.1787/6e70bede-en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Paris: OECD.

A Study on the core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Kim, Ki-tae

Lee, Ju-mi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study, we defined ‘essential expenditure’ as the sum of spending on such essential household items as housing, water, energy,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e then compared the level of essential expenditure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For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as used. For European countries, the Household Budget Survey data was used. Essential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was higher in Korea (47.2%) than in any other country examined.

Although Korean households were found to spend only half as much on housing, water, energy (11.2%) as households in the other countries, expenditures on education (11.1%), telecommunications (5.7%), and healthcare (6.8%) were higher in Korea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comparison. In particular, the fact that Korea's education cost is about 10%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has pressed the burden of spending on Korean households. In order to help reduce the essential living expenses for Korean households, we emphasize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public aspect of housing, water, energy,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부록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구 지출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

이번 연구는 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나누어 유럽 8개국과 비교·분석한 것이다.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설정했다.

첫째,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으로부터 유럽 28개 국가 가계의 지출 항목을 담은 **가구지출설문(HBS: 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 **가계동향조사** 비목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두 조사 모두 가계 지출 항목의 기준으로 국제 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0).

둘째, 두 자료를 이용해 **유럽의 네 가지 체제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를 각각 두 개씩 골라 한국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유럽의 여덟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북유럽 모델), 프랑스와 벨기에(보수주의 모델), 영국과 아일랜드(자유주의 모델), 스페인과 그리스(남유럽 모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해당 국가 통계청의 비협조와 자료의 일부 변수값 부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누락됐다.

셋째, 가구 유형을 ① 전체 가구 ② 노인 단독 가구(65세 이상) ③ 4인 가구(부모+자녀 2인)로 나누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교육비 분석에서는 교육비 지출 액수가 적은 노인 단독 가구 대신 3인 가구를 포함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자녀 연령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자녀의 연령을 만 16세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럽은 그러한 사례가 적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유럽 가구지출설문 자료상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스웨덴 등)가 존재하고, 별도로 구분해 둔 가구 유형에서 자녀의 연령 기준을 16세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넷째, 필수재의 범주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한정했다. 우선 집합재로서의 4개 범주(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를 대분류 기준으로 정하여 분석했다. 한국 가계동향조사와 유럽 가구지출설문 모두 가계 지출의 범주를 ① 식료품·비주류 음료 ② 주류·담배 ③ 의류·신발 ④ 주거¹⁾·수도·광열 ⑤ 가구용품·가사서비스 ⑥ 보건 ⑦ 교통 ⑧ 통신 ⑨ 오락·문화 ⑩ 교육 ⑪ 외식·숙박 ⑫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물론 ① 식료품·비주류 음료 역시 필수재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 정책의 대상 범주인 다섯 개 범주 가운데 교통·통신으로 묶어서 네 범주로 한정했다.²⁾

1) 주거비에는 실제 임대료, 귀속임대료(Imputed rent), 주택 유지 및 수선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연료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분석에서는 귀속임대료를 주거비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귀속임대료를 소비지출에 포함할 경우, 유럽 국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HBS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은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31.7%로 귀속임대료를 제외할 때(19.6%)보다 12.1%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귀속임대료 관련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물론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생활 분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지 영역에 포함된다. 더욱이 식품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에 포괄되는 영역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복지(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등 다른 지출 영역도 대부분 이번 분석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보고서는 사회 정책의 영역을 다소 협소하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한정했다.

다섯째, 자료 분석 연도는 2015년도로 정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가계동향조사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9년 혹은 2020년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구별 소득값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구간 변수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 변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값이 제공되는 가계동향조사(분기) 자료는 연간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간 소득 통계가 확보되는 2015년 자료를 활용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의 2015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유럽 가구지출설문의 2015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자료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5년마다 생성되는 HBS 자료의 2020년 데이터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 시점보다 7년 앞선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고로 영국은 HBS에 2015년 자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2010년 자료를 사용했다.

여섯째, 한국이나 유럽 국가 가구들의 총소비지출액 대비 개별 소비지출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가구별 비율을 구한 뒤 평균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전체 가구의 특정 지출액을 합산한 값을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액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해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한 나라에 A, B 두 가구만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방식대로 총소비지출액 대비 교육비 지출액 비율을 구하면 $70\% [0.7 = (A\text{가구 비율 } 0.4 + B\text{가구 비율 } 1.0)/2]$ 가 된다. 두 번째 방식대로 계산하면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약 40.5%가 되는데, 계산식은 $0.405 \approx (4,000 + 100)/(10,000 + 100)$ 이다. 두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특정 지출 비율을 재는 두 가지 방식

구분	총소비지출액	교육비	가구 비율 평균 기준	전체 가구 전체 지출액 평균 기준
A가구	10,000	4,000	$0.4 (= 4,000/10,000)$	
B가구	100	100	$1.0 (= 100/100)$	
합계	10,100	4,100	$0.7 (= (0.4+1.0)/2)$	$0.405 (= 4,100/10,100)$

자료: 필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전체 소비지출과 함께 계산식에 들어가는 소득이 0인 가구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는 예를 들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0인 가구가 46가구 있었다. 소득이 0인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고 지출액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소득 대비 특정 범주 지출액 비율은 지나치게 큰 수치가 되고, 이러한 가구들의 비율이 전체 평균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경상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이 200%가 넘는 가구가 26가구 있었다.

일곱째, 소득 기준은 총소득, 엄밀히 말하자면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³⁾으로 산출했다. 김기태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을 국제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했으나, 유럽 가구지출설문에서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통계청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총소득 기준을 활용했다.

여덟째, 소득 및 모든 지출 항목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균등화했다. 교통 및 통신비는 균등화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가구 지출 부담을 반영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통일성 측면에서 모든 비목을 균등화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기태, 정은희,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박은정, 송지원. (2019).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통계청. (2020).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Eurostat (2021. 9. 14.) RE: Re:RE: An inquiry regarding HBS datasets from KIHASA - RPP73/2021 - HBS 이메일 답변.

3) 소득 변수(EUR_HH095)의 범위에 대해 유럽연합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각 국가에서는 연간 기준의 소득값을 제공하며, 따라서 비경상소득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즉, 분석에 활용한 소득 변수(EUR_HH095)는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값으로, 경상소득만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HBS는 소비 관련 자료를 주로 담아서, 가처분소득과 같은 자세한 소득 자료는 담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 통계청은 연구진이 보낸 문의 사항에 대한 답신에서 복권과 같은 비경상소득도 소득 변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유럽 국가들에서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 값을 보내면서 비경상소득도 대체로 포함한다. 일부 극단값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유럽연합 통계청은 HBS 자료상에 나타나는 극단값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Eurostat, 2021. 9. 14. 이메일). 이 연구 과정에서도 일부 극단값이 발견되었으나, 연구진이 검토한 결과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하나의 값을 제외하고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유럽연합 통계청에서 극단값을 조정할 결과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실제 분석 과정에서 평균값을 좌우할 정도의 극단값은 찾기 어려웠다. 셋째, 일부 매우 큰 값도 실제 소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